

홍준표 “공천 미끼로 줄세워” vs 윤석열 “가족이 후원회장”

윤석열 캠프에 김태호·박진 등 중진 합류

洪 “천박한 인식 이어 줄세우기 정치 전형”

尹 “답할 가치없어...중대결심 하건 뿔하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을 10여 일 앞두고 '윤홍 대전'이 격화되고 있다.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은 24일 윤석열 캠프의 중진 영입과 홍 후보 부인 이순삼 씨의 후원회 관리를 두고 격돌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가 선거대책위원장에 김태호·박진 의원, 심재철 전 국회의장의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공동선대

위원장으로 영입한데 대해 “광역 단체장 공천을 미끼로 중진들을 데려가려는게 새로운 정치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천은 엄연히 당 대표의 권한”이라며 “이미 개 사과로 국민을 개로 취급하는 천박한 인식이 만연하에 드러났고 줄세우기 구태정치의 전형이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러다 한방에 훅 간다”고 경

고했다.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각종 공천 미끼에 혹해 넘어가신 분들은 참 측은하다”라고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인사들을 저격했다.

이어 “2014년 4월 경남지사 경선 때 청와대가 개입해 경남도내 전 국회의원을 공천으로 협박, 모두 친박 후보를 지지하게 한 당내 소규모 대의원 경선에서도 민심과 당심을 업은 제가 이긴 경험이 있다”며 “그때 친박을 진두지휘한 분이 오늘 윤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넘어갔지만, 대규모 모바일 투표 시대 당내 경선은 또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에 윤 후보는 이 발언과 관련해 “답변할 가치가 없다”라고 쏘아붙이

면서 홍 후보의 후원회를 반격카드로 꺼내들었다.

‘개 사과’ 관련해 부인 김건희씨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 과정에서 나왔다.

윤 후보는 이날 캠프 인선 발표 후 ‘사진을 찍은 사무실이 부인 사무실인가’라는 질문에 “제 처는 그런 내용을 모른다. 사과 관련 스토리를 해준거고 그걸 하면 좋겠다 제가 판단해서 하라고 한 것”이라며 “어떤 분이 가족이 후원회장도 말하는데 선거라는건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라 하지 않나”라고 홍 후보를 겨냥했다.

이어 “제 처는 다른 후보들처럼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라고도 했다. 윤 후보는 또 홍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을 이재명 후보와 1대1로 4차 조사로 선관위가 결정할 경우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서는 “중대결심을 하건 뿔 하건 각자 판단할 문제”라면서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우리 당원과 국민만 바라보고 갈 뿐이지 유불리를 생각한 적이 없다”라며 홍 후보의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이낙연, 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 맡는다

이재명 요청에 참여 수락...정권재창출 '원팀' 의지 다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한 찻집에서 만나 포옹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4일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을 맡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한 찻집에서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대위 참여 요청에 따라 이같이

협의했다고 이낙연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오영훈 의원이 전했다.

오 의원은 30여분간 차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두 분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이 후보는 이 전 대

표계 선대위 참여를 요청했고 협의한 결과 이낙연 대표가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측은 이 전 대표의 대표 공약이었던 신(新)북지 정책 계승을 위한 후보 직속의 제1위원회 구성도 합의했다. 이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게 된다. 이낙연 캠프에 몸을 담았던 의원들의 선대위 합류 논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오 의원은 “캠프에 참여한 의원들도 참모들끼리 상의해 참여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이재명 후보는 이 전 대표의 핵심 공약인 신북지 정책을 후보 직속 선대위 제1위원회를 구성해 공약을 직접 챙기겠다는 말을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게 패인 이재명·이낙연 지지자들간 화합적 결합에 대한 양 측의 요청도 있었다.

이 전 대표는 “지지자들께서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이어간다는 대의를 버리지말기를 호소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마음의 상처가 아물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오 의원은 전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소병철 의원, 공군 성폭력범죄 수사결과 질타

재수사·법사위 청문회 제안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9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군 성폭력 사건이 피해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2개월이 훨씬 지나서였다는 것은 범행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사건 조사과정에서 소위 2차 가해를 가중한 것도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부실한 조사와 피해를 가중 시켜 죽음으로 내몬 관계자들은 전혀 책임을 묻지 않은 최종 수사결과는 군 수뇌부 특히 국방부 장관을 신뢰한 유족들, 국민들을 배신 것이라고 질타하였다.

지난 6월 10일 법사위에서 피해자 우선주의 등 이 사건에 임하는 4가지 원칙을 제시했음에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군사법원에서 특임 군검사의 통신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한 것은 군 감싸기, 수사의 성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소 의원은 “개정된 군사법원법 시행 8개월 전이라도 국방부장관 재임중 군내 성범죄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엄중한 재수사 착수 필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재조사, 재수사를 해야만 유족들과 국민들의 분

노가 해소될 것이므로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시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를 건의하였다.

이어서 소 의원은 “지난 8월 31일,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 내 성범죄,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등은 군사법원 재판권에서 제외됐지만 군 내 폭행이나 가혹행위 범죄는 여전히 남겨져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비군사범죄 일체를 군사법원 재판권에서 제외하고 민간에 이첩하여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재수사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하고 “(군사법원의) 실행율이 낮은 문제는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종형 고등군사법원장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국방부는 ‘군 법무관의 퇴직 후 재취업 자료’를 요구한 결과, 자료 자체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 공

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심사가 적용되지 않는 군 법무관 제도 개선해야 한다.공공연하게 알려진 군 내 범죄 담당 유명한 로펌이 존재하고 이 구성원들은 다수의 군 판사, 군 검사 출신들이 포진해있다.

이번 사망 사건의 가해자가 이러한 특정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기도 했다. 심지어 군 법무관 출신 일부 변호사들은 군 내 범죄에 대한 변호의 성공사례를 홍보하는 사례도 있다.

군 법무관의 법무법인 재취업이 가능한 공직자윤리법의 독소조항인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7항에 명시된 ‘공개대상자’를 ‘등록무자’로 개정하고 고위 군 법무관(대령 이상)의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들도 일반의 체계에 맞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제한 및 취업승인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은 “퇴직한 군 법무관의 전관 문제 포함해서 공직자윤리법에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봐도록 하는데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취업의 과도한 제한도 같이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균형점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